

'98 식품 위생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해 등의 영향으로 식품의 오염가능성이 증가하고, 외식산업의 급신장 및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 물량이 급증하는 등 식품위생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하여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세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IMF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국민모두가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나 “푸 집한 한상차림”을 선호하는 식관습은 여전하여 막대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환경오염의 차원을 넘어 이에 따른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 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여러가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본

위기 확산을 위한 포스터·표어·실천수기 공모전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 기초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식품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통한 위생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

'96년에 출범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안전관리를 총괄·전담할 독립된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개편할 계획으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의 발족으로 식품위생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의 FDA와 같이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원료,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비자보호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을 안전본부(또는 독립청)에서 계통적으로 총괄관리하도록 하여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식품위생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는 향후 일관된 정책목표가 될 것이다.

특히, 엄격한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식품첨가물,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허가관리를 안전본부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하며,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유통, 소비의 전과정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실시중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는 그간 식육제품, 어육제품, 냉동수산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HACCP는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 도입 및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수거 등 규제조치를 완화해 주고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시설·설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식품회수(Recall)제도 및 광고사전심의제도가 계속하여 실시될 것이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할 수 있는 회수명령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자진회수를 장려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회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

양식품(저열량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관련 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한 자율심의 형식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는 바, 문제성 있는 광고를 사전에 여과하고 광고의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식품광고문화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식품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지난해에 이어 식품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불합리한 성분배합기준·제조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성 기준·규격을 정비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시킬 것이며,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대상식품의 범위, 평가승인 절차 및 표시방안 등 안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료의 발달에 따른 신개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보완할 것이다.

식품첨가물 지정 및 개정의 일반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적정사용 및 제조기준, 식품으로 이행되는 양에 대한 기준 연구 등을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다.

3.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콩나물,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기초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다소비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약사용·재배콩나물, 각종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제조하는 두부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중인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

화하여 각 기관별로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올해에는 그간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4.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외 공인검사기관 인정제도는 국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일부 항목을 인정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미국 Oregon주 수출서비스센터가 유일한 지정례이다. 현재 신청중인 호주 등의 검사소에 대한 지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확대하여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역소의 업무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시료채취를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과 통일되고 객관적인 검사를 위한 관능검사 기준 등 합리적인 수입식품 검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과거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강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수입식품의 위해물질정보, 수출국의 상황, 과거의 위반사례 등 광범위한 정보를 D/B화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에 따라 검사대상을 분류하는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축된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수입식품검사 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과학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FDA, FSIS의 회수조치 등 외국 식품검사기관의 식품위생조치내용을 수집·활용하는 등 선진국의 최신 식품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5.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 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공학기술, 위해물질 신속검사기술 등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고가 생산 및 연구장비의 공동이용을 장려하고 현재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된 “식품수출 및 통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내식품의 수출촉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상의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자가품질검사 철저히 이행, HACCP 시행, 수거검사결과 우수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우수업소’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식품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원료의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고, OECD 등 경쟁상대국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인상하는 등 역관세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식품진흥의 목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재원인 과징금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고 기금관리는 시·도에서 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로 역류되고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어 그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제조 및 집객업소에 대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지난해에 이어 「좋은식단」 보급을 활성화하여 전체 일반음식점,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음식점, 한정식집, 일식집, 집단급식소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모범업소」로 우선 지정하여 쓰레기봉투비 및 쓰레기 감량시설 구입비 지원, 시설개·보수비 용자지원 추진, 상수도료 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 영업자 교육시 「좋은식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96년에 발족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푸짐한 한상차림'을

선호하는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표어·실천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활용하여 지하철부착광고 등을 실시하였는 바, 올해에는 홍보수단을 더욱 다양화하여 VTR 제작, PC통신 등 첨단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특히 초등학생 및 음식점영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좋은식단」 보급 활성화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으므로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금년 상반기내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먹고싶은만큼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은 남기지 않는 식생활방식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